

“일반농가 진입장벽 낮춘 스마트팜 모델 개발해야”

도의회 스마트농업 활성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열고 주문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 농업활성화연구회(두세훈 대표의원)’는 지난 13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원예농업 스마트 영농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두세훈 의원(안주2)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진청)은 ‘아시안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ICT를 적용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농업인이 고령·영세농으로 단기적인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도내 농가들의 스마트영농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은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전북도 원예농가의 스마트영농 접근성과 생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하는 등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소진 센터장(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은 “전남도와 농협경제지주의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사례를 소개하며,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자작농이 쉽게 도입 가능한 저가형 기자재·설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가당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단순 자동화패키지만 적용된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3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원예농업 스마트 영농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설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내 권역별로 스마트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편의성,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은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팜 보급면적이 지난 2014년 405ha에서 2018년 4,510ha로 10배 이상 증

가했다”며 “농업의 내부 여건과 미래 환경 변화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가 스마트영농화 활성화로 시설원에 분야 전국 최고의 기술 수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농업활성화연구회’는 두세훈 대표의원, 나인진 연구책임 및 8명의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통해 도내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유호상 기자

‘도민의 행복 미래 파트너’

전북사회서비스원 개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원식 공공부문 서비스 직접 제공 등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 기대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북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안열)이 16일 유튜브와 줌 온라인으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당초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개최된 예정이었던 개원식은 도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

도는 올해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타당성 검토, 관계자 및 도민 대상 공청회, 행정안전부와 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을 거치고, 올해 2월 조례 제정, 임직원 공개모집 등 제반

행정절차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지난 10월 2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전북도사회서비스원’은 본부와 산하시설로 운영이 되며, 본부는 1본부 3팀, 산하시설은 2022년 9개소를 시작으로 지역간·시설유형 등을 고려해 위·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서비스 평가 결과 저조한 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가 위탁을 희망하는 시설 중심으로 수탁을 확대해 나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전주시에 장수군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해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들이 돌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회계, 법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안열 원장은 “도민의 행복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 구축을 위해 든든한·따뜻한·존중받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 비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전북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현장의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기대를 갖고 출범하는 만큼,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에서도 전북도사회서비스원이 전북 도민의 행복미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1인 창조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정부 지원

신영대 의원, 판로 지원법 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과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인창조기업”이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신 의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지난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홍보 역량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해 놓고도 유통망에 진출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뛰어난 상상력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업자들이 사업 성공화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에 큰 도움”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근)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근 의원은 “2023년부터 도입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담세금을 받는 것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철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팀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했고, 신현영 도 대도약년과정이 전북도민사랑제도 연계 방안, 김중남 도 세정과장이 ‘기부금 활용 방안’, 문성철 도 정부기획과장이 ‘출향도민 참여 확산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근)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전북형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목표로 1년간 활동한다.

회원은 박용근(대표), 성경찬(연구책임),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중 행정자치부위원장, 김대중 김기영, 황의택 홍성임 의원이다. /유호상 기자

“균형발전 위해 국토정보역량 활용을”

김두관 의원, LX 방문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이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방문해 균형발전과 디지털 국토정보의 연계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전략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LX는 가상융합공간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D와 동적 공간정보가 결합돼야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관광 등 디지털 신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표준화 플랫폼과 인력 양성 등에 있어 선제적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LX는 이와 관련해 전주 시 도시 모습

과 동일한 3D 공간정보를 구축해 행정데이터를 연계한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구축 완료했으며, 지자체 트윈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정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도 지속 투자를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간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수행되고 내면, 차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호상 기자

이원택 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등 수상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최우수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농림어업 경제회복지원 공모대상’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16일 호남유권자연합이 선정하는 2021년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호남유권자연합은 한 해 동안 투명하고, 뛰어난 행정 리더십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큰 공적을 일궈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을 선정해 표창해오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활동과 입법활동에서 좋은평가를 받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차세대 정치리더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1년 9월부터 2개월간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상자를 선정했다.

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는 2021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이 열려, 이 의원이 ‘농림어업 경제회복지원 공모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의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국민행복시대가 주관하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분들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정연수센터, 내년부터 전북서 운영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관련 예산 확보

지방의원 등 1만여명 대상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구 구성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22년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에 지방의회 의

원과 사무처 직원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0만원을 수립했다.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3,760여명에 달하며, 사무처 직원은 5,500여명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TF단장을 맡아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앞장서 온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해왔는데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다”며 “지방의회 연수를 전담할 기구가 마련되는 만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높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특히 2022년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는데다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해여서 교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전문 교육 기관으로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